

“예타제,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 대통령,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

“대규모 예타 면제 우려 없지 않아… 정부도 특별히 유념
지역 전략사업 발굴 적극 지원… 지역경제 한 단계 도약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국가발전 선순환 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타 면제를 둘러싼 우려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이 필요하고,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수준의 면제 결정 배경만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그리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3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에 당이 우뚝 서도록”

민주 임순남 지역위 단배식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승)는 지난 7일 오전 남원 컨벤션리조트에서 2019 단배식을 갖고 기해년을 합차게 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단배식에는 박희승 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시도의원, 고문, 운영위원 등 당직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김 전 문화재청장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그곳의 브랜드를 역사와 문화로 만들어가는 추세이고, 문화

재에 담긴 역사성, 스토리가 많음에도 지역발전과 별개로 진행되어 온 지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희승 위원장은 “신년 단배식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민주당 임순남 지역위원회가 되어 총선 승리에 우리 민주당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과 새로운 희망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소통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남원 컨벤션리조트에서 2019 단배식을 갖고 기해년을 합차게 출발했다.

송성환 도의장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차기 주자로 김승수 전주시장·김동원 전북대 총장 지목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8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주)제주패스가 시작한 환경운동으로 참여할 때마다 1,000원씩 적립돼 세계자연기금의 자연보호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참여방법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텀블러 사진을 찍은 뒤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인증하고 다음 동참할 주자 2명 이상을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송성환 도의사의 지목으로 이뤄진 이날 캠페인에서 송 의장은 전라북도의회 1층 로비 휴게공간에서 평소 사용하는 텀블러를 개인 SNS에 인증하며 ‘플라스틱 프리챌린지’에 동참했다.

송성환 의장은 “플라스틱 페트병이 분해되는 데 무려 400년이 걸리는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며 “도의회에서도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를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김진성 기자

‘창당 1주년’ 평화당… “부족한 점 메운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 기념식

정동영 “정치개혁 완수로 생존 증명해야”

민주평화당은 지난 8일 창당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3·1운동과 2·8 독립선언 100주년, 이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담아 기념식 장소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정했다.

평화당은 기념식 이전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기념식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짚어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정대철·이훈평 등 고문단을 비롯해 의원실 관계자, 주요 당직자,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회

에서 “지난 1년의 부족한 점은 메우고 확신을 가졌던 일에는 힘을 내서 1년 뒤 21대 총선을 향해 끊임없이 뚝심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 장소를 서대문형무소로 잡은 이유에 대해 그는 “이 장소는 자주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 6만여 명이 수감됐었고 수많은 민주지사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꿈과 열망을 안고 고통을 겪은 곳”이라며 “이 자리에서 평화당의 창당 1년을 기억하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기념사에서 지난해부터 당론으로 채택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활동 평가와 향후 계획도 전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내

최대 정치이슈로 끌어올린 것은 평화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의 열매와 과실을 국민 여러분 손에 쥐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집권여당의 무능 그리고 인일함으로 제도개혁은 실패했다. 법과 제도로 완성된 개혁성과는 전무하다”며 “집권여당은 경제민주화 앞에서 회군을 망설이고 있다. 자기 오만으로 개혁동력은 흔들리고 있고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개혁야당 평화당이 개혁을 이끌고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총선을 1년 가량 앞둔 시점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1년이 평화당의 생존증명기간이다. 이를 정치개혁의 완수로 증명해야 한다”며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 민생정당으로 성공하

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서 강하게 싸워나가자. 젊고 유능한 개혁리더들을 결집해나가자”고 보았다.

평화당 관계자들은 기념식 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야외에서 만세삼창을 외치며 창당 1주년 기념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기념식 후 이들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연동형비례제 도입 촉구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사전 신고 집회를 하지 않아 시행이 연기되는 못했다.

한편 평화당은 오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중국 상하이로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관련 세미나 등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